

# 헌법학자들 “초헌법적·위헌적 국가권력 행사”

### “판단·선포 절차 등 권한남용 여부 판단 선행돼야” “탄핵 사유로 비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가 해제한 이후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행위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러 헌법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대체로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에서 탄핵 사유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계엄이라는 건 경찰력에 의해서 도저히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비상사태 발령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가 아닌 압박했다는 정도의 상황”이라며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 같은 데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없는데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고 하면 이전 권한의 오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학계의 대표적 한 원로 교수도 통화에서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 요건을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가능한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상황”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회범 변호사는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헌법 77조 위반이고, 계엄법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계엄법도 위반했다고 본다”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 위헌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너무 중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당장 위헌 여부 논란보다 우선 대통령의 판단 과정이나 선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이 권한 남용 여부인지에 대해 짚어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령 사태 시청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4일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뉴스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 불과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미스터리’

### ‘자유헌정질서 수호’ 신념에 따른 ‘무리수’ 지적 일부 최측근과만 계획 공유 판단 오류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30분 만에 끝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중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이번 계엄 선포를 ‘자충수’라고 하는 이유다. 이렇게 길게 잡아봐도 6시간 만에 맥 없이 끝날 일을 도모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과잉되면서 오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 편성권 침해로 인기 반란점을 돌면서 주요 국정 과제가 제자리를 맴돌자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는 국회를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거나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 격정적인 표현이 담겼다. 통상 대통령의 문법이라기보다는 전장의 격문에 가까워 신념이 과도하게 투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도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실제 계엄을 성사하려는 목적을 세웠다기보다는 야당의 예산 처리와 탄핵을 과도한 정치적 공세로 몰아 부당성을 알려줬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그러기에는 이번 사태 전개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비상계엄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국회 과반 의결이던 바로 해제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게 바로 대통령실의 대응 논리였다. 실제로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극소수의 참모와만 계획을 공유하면서 계엄 사태

가 가져올 거센 후폭풍을 고려하지 못한 채 허점을 노렸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작전에 경호처장을 역임했으며 윤 대통령의 총참모관 1년 선배로 최측근으로 통한다. 야당에서는 이번 작전 실행에 일부 핵심 군부대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총참모관 라인’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고위급 참모는 물론 대다수 국무위원조차도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를 몰랐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인 국무회의에도 의결 정족수만 넘길 정도의 소수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무회의에 들어왔던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 대법원장 “국민 걱정 말라”...헌재소장 대행 “신중·민첩 대응”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이후 첫 출근길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차후에 어

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문형배(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출근길 취재진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